

民主化와 國際關係

—北方外交와 東北亞—

具 永 祿

<目 次>	
1. 한국의 민주화와 외교정책	4. 새로운 경제이익
2. 적절한 정치적 利害의 모색	5. 미래의 전망
3. 안보이익의 재조명	

1. 한국의 민주화와 외교정책 : 지역협력의 모색

韓國의 北方外交는 政治民主化와 거의 때를 같이하여 전개되어 왔다. 보다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外交面에서의 진전이 國內政治의 민주화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몇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엄청난 변혁이 사회주의세계에 일어나고 있으며, 소련을 위시한 동구권 사회주의국가들의 이러한 혁명적 상황은 한국의 북방외교 공세와 거의 때를 같이하여 전개되었다. 한국은 安保面에서나 경제협력관계에 있어서나 동북아 지역협력이라는 새로운 운명체를 개척하여야 할 시점에 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본다면 한국은 정치이념을 초월한 인접국간의 새로운 형태의 지역주의협력을 국가이익의 중요한 우선 순위로 삼아야 할 시기에 이른 것이다.

韓國의 모든 국가이익 가운데 인접국과의 평화적 상호관계는 가장 중요한 가치 중의 하나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평화적 상호관계는 결

국 經濟的, 文化的 이익이나 國家生存 등과 같은 다른 이익들과 서로 얽혀 있다. 好戰的 국가와 인접해 있고 동일지역내 국가들과의 의미있는 교류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느 국가도 안정된 平和와 번영을 향유할 수는 없을 것이다. 반면 인접국가간에 평화적 교류와 적극적인 경제협력이 이뤄진다면 그 지역국가들은 평화와 경제적 번영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한국의 경우에도 평화적이고 호혜적인 관계가 미래에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못한다면 인접국과의 국가적 안녕은 환상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지리적 위치 때문에, 한국은 東北亞 정세에 있어 중요한 전략적 지위를 점하고 있다. 한국은 동서남북의 사방에 자연적 국경선을 갖고 있는데, 日本은 남동부에서 약 120마일 떨어져 있으며 中國의 山東반도는 서쪽으로 대략 이와 비슷한 거리에 위치해 있다. 韓·蘇 접경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북부 경계선은 滿洲와 접하고 있다. 즉 한국은 대다수 태평양 열강의 中央에 자리잡고 있는 셈이다. “한국이 겪은 비극적 역사의 주된 요인은 古代 팔레스타인이나 근대의 폴란드처럼 그 地理的 위치에서 비롯된 탓이며, 이는 역사적으로 한국이 겪어온 불행한 사건들의 근본적 원인”¹⁾이라고 흔히 거론되곤 하는데, 이처럼 한국의 地理的 위치는 오랫동안 과거 역사를 뒤엎은 분쟁의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한국의외의 기구한 운명은 약 36년간 日帝의 강압적 통치 이후 국토가 分斷되었다는 사실에서 비롯되었다. 한국을 두개의 군사적 점령지역으로 분할한 것은 결과적으로 상반된 이데올로기를 지닌 적대적 정권의 출현을 초래했다. 미국의 지원을 받는 남쪽의 대한민국과 소련의 지원을 받는 북쪽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두 적대적 정권의 출현은 한반도를 매우 불안정하고 비정상적인 상태로 이끌었다. 美·蘇 두 강대국간 冷戰關係의 출현과 함께 이러한 非正常性은 한국전쟁의 주된

1) Kyung Cho Chung, *New Korea*(New York: Macmillan Company, 1962), p. 2.

원인의 하나가 되었다.

이러한 비극적 상태는 앞서 언급한대로 남북한의 국제정치상의 위치에서 비롯된 것이다. 다시 말해 남북한 모두 독립국가로서 지역내 국가들과의 자유로운 교류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이 지역의 사회주의 강대국인 중국과 소련은 한국에 대해 적대적이었으며 사실상 최근까지 이들과 한국 사이에는 어떠한 형태의 관계도 이뤄지지 못했다. 북한의 경우에도 태평양의 경제강국인 日本과 미국에 대해 이와 유사한 비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여 왔다. 태평양지역에서 높은 이해관계를 갖는 이념적으로 적대적인 국가간 뿐만 아니라 인접국간에도 다양한 상호교류의 기회를 가질 수 없었다는 점에서, 남북한을 포함하여 이 지역 모든 국가들에게 손실이 있었던 것이다.

최근까지 한국은 제한된 자원과 정치적 취약성을 지닌 외교관계 때문에 능동적으로 지역이익을 추구할 수 없었다. 한국이 지역주의에 관심을 보인 최초의 가지적 성과는 1966년 서울에서 제 1차 아시아·태평양 각료회의(ASPAC)를 개최한 것이었다. ASPAC 결성의 기원과 동기는 회원국간의 군사적, 경제적, 문화적 협력이었다. 한국의 애당초 의도는 지역내의 共產勢力에 대항하는 地域的 共同防衛體制의 확보였으나, 결과적으로 그러한 협력체제는 스스로의 힘과 영향력을 넘어선 것임이 판명되었다. 회원국들의 다양한 정치적 이해관계는 생존력있는 지역기구의 형성을 어렵게 했다. 1970년대초가 되면서 ASPAC은 기술·문화분야를 제외하고는 모든 실질적 목표에 있어서 거의 유명무실한 존재가 되었다.

朴正熙, 全斗煥 정권하에서 지역협력체를 창설하려는 많은 시도가 있었으나 모두 무위에 그쳤다. 지역협력에 대한 전두환 대통령의 관심은 1981년 6월 인도네시아,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그리고 그 뒤 호주를 공식방문하면서 분명하게 드러났다. 상호협력 및 공동관심사에 대해 토의하기 위한 太平洋頂上會議라는 자신의 제안을 뒷받침하기 위해, 그는 외무부내에 특별연구진을 설치하였으며 또한 東南亞

여러 나라에 특사를 파견하였다.²⁾ 이러한 선의의 노력은 두 독재자가 온갖 수단을 모두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현되지 못했다.

활기찬 지역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한국이 실패한 것은 대체로 前職대통령과 측근들의 방향감각 없는 사명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東아시아의 많은 다양한 국가들을 조직된 지역기구, 혹은 상호협력을 위한 다소 느슨한 형태인 정상회담이라도 끌어 들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 지역은 共同體 의식보다는 異質感에 의해 더욱 폭넓게 특징지어지기 때문이다. 東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지 않으며, 지리적 거리감은 국가적 경험과 발전에서뿐만 아니라 종교적, 문화적, 인종적, 이념적 차이에 의해 더욱 멀어져 있다.³⁾ 더욱이 국가적 안보이해와 경제발전 수준의 不均衡에 따른 인식상의 차이는 東아시아 국가들의 지역적 일체감의 결핍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한국의 국가이익이란 관점에서 볼 때, 인접 강대국인 소련을 포함한 東北아시아지역 국가들과의 협력관계를 발전시키는 일은 절실한 것이다. 소련은 中國 및 韓國과 많은 부분에서 자연적 國境을 접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리적으로 엄격히 구분한다면 소련은 東北亞 국가는 아니다. 그러나 단지 이데올로기의 차이와 共產國 북한의 존재라는 이유 때문에 한국이 주변 강대국들에 의해 배제되거나 무시되는 것은 분명 부자연스러운 일이다. 中國, 日本과 한국은 그들의 이데올로기적 정향이나 정치체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文化的 뿌리를 갖고 있다. 북한과 소련을 포함한 이 지역 국가들간의 지역적 협력은 이데올로기의 차이와 과거의 쓰라린 기억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내의 安保 이익과 경제적 이익을 확실하게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2) Youngnok Koo, "The National Interest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Claude A. Buss, *National Security Interests in the Pacific Basin* (Stanford: Hoover Institution Press, 1985), p. 77.

3) Richard L. Sneider, "Regionalism in East Asia," in Robert A. Scalapino and Masataka Kosaka(eds.), *Pecae, Politics and Economics in Asia* (New York: Pergamon-Brassey's International Defense Publishers, 1988), pp. 188-189.

한국의 지역적 이해관계는 주로 東北亞 지역에 놓여 있다. 한국의 운명은 본질적으로 東北亞 국가들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의 국가이익의 확대와 증진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는 국가들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적절한 정치적 利害의 모색

돌이켜 보건데, 20세기 東北亞 국가간의 정치적 관계는 그다지 바람직하지도 평화적이지도 못한 역사였다. 단적으로 말하자면 오히려 그 반대로 전개되어 왔다. 그러나 적개심과 비난으로 점철된 과거 역사에도 불구하고 各國의 정책이 時代의 흐름에 맞추어 재조정되어야 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고르바초프(Mikhail S. Gorbachev)는 UN총회 연설에서 “모든 지역갈등의 鑰이 우리 모두를 향해 울리고 있다”⁴⁾고 말한 바 있다. 지역갈등이 도처의 모든 국가들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 문제는 갈등지역내의 국가들에게는 분명히 보다 파괴적인 것이 될 것이다. 또한 같은 지역내의 국가들이 계속적으로 갈등상태에 있거나 어떠한 경제교류도 가능케 하지 않는 지속적인 적대상태에 놓여 있다면, 그러한 분쟁과 갈등의 상태에 놓인 모든 국가들은 지역적 경제활동을 통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은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 최근까지 한국의 경제관계는 서방진영 국가들, 주로 미국과 일본에 국한되어 왔다. 북한, 중국, 소련 등의 지역국가들과는 어떠한 의미있는 교역관계도 존재하지 않았다. 만약 이 지역국가들이 정치적 장애를 극복하고 격렬한 경쟁과 세력다툼으로부터 해방되어 적극적 경제교류를 행할 수 있게 된다면, 東北亞 지역은 장차 강력한 지역으로 등장할 수 있을 것임에 틀림없다.

1988년 하계올림픽은 과거 외교관계가 수립되지 않았던 사회주의 국

4) 고르바초프의 U.N. 총회 연설문. *The Guardian*, December 18, 1988을 볼 것.

가들을 대상으로 ‘北方政策’을 추진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북한의 참가거부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소련을 포함한 거의 모든 사회주의 국가들이 서울올림픽에 참가함으로써, 그 결과 160개국의 참가라는 기록을 세우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일은 한국의 외교적 노력이 결국에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하나의 징표가 되었다.

한국의 외교활동에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일은 한국과의 경제교류 확대 의사를 밝힌 1988년 9월 고르바초프의 크라스노야르스크 연설이었다.⁵⁾ 1989년말에는 영사기능을 수행하는 소련 무역대표부가 서울에 설치되었고⁶⁾, 한국도 이에 상응하여 모스크바에 무역사무소를 개설하였다. 또한 중국은 이와 유사한 사무소를 서울에 개설하기 위해 한국과 협상을 진행중에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 외교사에 있어 보다 극적인 사건은 헝가리, 폴란드, 유고슬라비아 및 불가리아와의 국교정상화였으며, 다른 동구국가들도 빠른 장래에 이런 경로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에 따른 새로운 국제기류는 지역간 뿐만 아니라 세계적 차원의 국제정치 일반에 있어서, 특히 군사적 긴장과 대치의 완화에 유익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제관계에서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은 한 저명한 전문가에 의해 다음과 같이 표현되고 있다.

아시아 安保에 대한 혁신적인 접근방안은 文明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인간가치의 우위, 세계간 상호의존, 자국의 주권존중, 사회진보의 다원주의, 대화와 협력이라는 주원칙을 갖는 정치적 新思考에 기초하고 있다. 국가간관계의 脫理想念化는 新思考의 가장 중요한 요소중의 하나이다. 즉 우리는 사회체제 혹은 이데올로기의 차이가 자동적으로 힘의 대결을 초래하는 것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고 확신하며, 국제관계가 강압이나 폭력에 의한 정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힘은 이제 정책의 기반으로 사용하기에는 너무도 위험한 수

5) Donald S. Zagoria, "Soviet Policy in East Asia: A New Beginning?" *Foreign Affairs*, Vol. 68, No.1 (America and World edition, 1989), pp.128-129.

6) *The Korea Post*, January 1, 1990.

단이 되어 버렸다.⁷⁾

소련의 정책방향의 점진적 변화와 여타 국내적·국제적 발전에 발맞추어, 북한을 제외한 東北亞 지역의 모든 국가들은 지역적 안정과 平和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들을 공유하기 시작한 것 같다. 또한 북한을 예외로 하면, 이 지역내의 어떤 사회주의 국가도 이념적 투쟁을 강조하고 있지 않다. 한국이나 대만과 같은 이 지역의 非사회주의 국가들의 냉전적 반공 이데올로기에 대한 최근의 입장에서 드러나듯이, 그 잠재적 두려움과 우려가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정책수단으로서의 정치이데올로기는 점차 약화되어 가고 있다.⁸⁾

최근에 들어 한국에서의 안보문제에 대한 급박한 위기감은 다소 감소되어 왔다. 한국은 북한에 대처하는 데 있어서 보다 자신있고 유연성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제관계에서의 전반적 조류는 북한 외교정책의 전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日本의 구라나리 다다시(倉成正) 前외무장관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북한정권의 불투명성은 외부로부터의 관찰을 계속적으로 어렵게 해왔다. 따라서 북한의 내부사정에 대해 다소간의 확신이라도 갖고서 이야기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북한은 “개방”(glasnost)을 철실히 필요로 하는 곳이다. 그리고 이러한 방향으로의 어떠한 진전도 한반도의 안정을 크게 진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⁹⁾

아마도 북한이 지역 및 세계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東北亞 지역내의 국가들간에 정상적인 외교적, 경제적 관계가 형성되기란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시급하고 긴요한 국가이익은 폐쇄

7) Mikhail L. Titarenko, "Asian and Korean Security and Stability," *Korea and World Affairs*, 1989, pp.278-279.

8) William H. Gleysteen, Jr., "Domestic Developments Affecting Stability and Regional Relationships in Northeast Asia," in Scalapino and Kosaka, *op. cit.*, p.108.

9) Tadashi Kuranari, "The Asian Situation and Japan's Response: With an Emphasis on the Korean Peninsula," *Journal of Northeast Asia*, Winter, 1988, p.70.

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 정책에 발맞추어 북한이 정책을 변화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돕는 일이다. 소련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노력을 경주한다면 동맹국 북한을 설득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며, 한국은 이러한 노력이 韓·蘇 양국 모두를 위해 최상의 이익이 될 것으로 여기고 있다.

3. 안보이익의 재조명

安保 문제는 1953년 휴전협정체결 이래 한국 외교정책의 최우선적 관심사가 되어 왔다. 한국전쟁의 결과로 남한은 313,000명의 사상자와 100만명 이상의 민간인 희생자를 낳았으며 250만 이상의 난민이 북에서 피난해 왔다. 북한의 경우 정확한 숫자는 파악할 수 없으나, 훨씬 많은 희생자를 내었으며 보다 막대한 파괴를 입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한국전쟁은 남북한 모두의 經濟를 파괴시켜 버리고 말았던 것이다.¹⁰⁾

한반도의 미묘한 군사적 균형상태는 지역안보와 세계안보에 명백한 위협이 되고 있다. 쓰라린 전쟁의 체험은 남북한간에 상호불신감을 조장하여 불안정한 상태로 이끌었기 때문에, 남북한관계는 이따금 비무장지대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군사분계선의 충돌사건 등을 포함하는 준전시상태의 대치관계로 특징지어져 왔다. 이와 같은 위태로운 군사적 균형상태는 때때로 북한의 도발, 간첩침투 또는 그 밖의 무모한 모험 등에 의해 악화되곤 했다. 이와 같은 남북한의 위협스러운 상황에 설상가상으로, 남북한의 군비경쟁은 作用·反作用(action and reaction)의 자연스러운 과정을 따라 계속 상승해 왔다. 남북한은 비무장지대를 따라 100만명이 넘는 병력을 상호 대치시키고 있는데, “북한은 모든 무기에 있어서 남한에 비해 2:1의 우위를 점하고 있다.” 더욱이 북한의 기습전

10) Youngnok Koo, "Reflections on the Future of Korean-American Relations," *The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Spring, 1983, p. 131.

태세의 유지와 기갑 및 기계화사단을 과거 서울로의 침공 루트를 따라 배치시킨 사실은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일로 간주되고 있다.¹¹⁾ 한편, 북한의 입장에서 본다면 국군과 주한미군의 배치는 그것이 아무리 방어적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북한의 안보에 중대한 문제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이러한 위협스러운 대치상태의 지속을 막는 일은 힘의 개념에 대한 再評價와 함께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安定, 平和, 繁榮과 같은 새로이 부각되는 지역적 개념들 안에 재구축하는 일이다.

북한의 對南政策에 대해 소련과 중국은 그동안 일방적으로 북한의 입장을 지지해 왔다. 그러나 고무적인 사실은 소련과 중국 모두 한반도에서의 어떠한 형태의 갈등의 재발도 지원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의 모험적 전략을 어느 정도까지는 제어하는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는 점이다. 실제로 鄧小平은 日本의 한 정치인에게 “중국은 북한이 한국을 침공한다면 이를 지원하지 않겠다”¹²⁾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또한 1983년 버마 랑군사건이나 1987년 KAL기 공중폭파사건과 같은 북한의 테러활동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불만을 표명해 왔다고 한다.¹³⁾

동북아에서의 소련군의 배치는 그 잠재적 표적이 중국이나 日本이란 점에서 한국의 安保에 대해 즉각적인 위협이 되고 있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S-20 미사일이나 TU-22M 백파이어 폭격기를 포함하는 소련군의 대규모 배치라든지 소련 태평양함대의 급속한 증강 등은 한국 정부의 큰 우려를 야기시켜 왔다. 소련의 이러한 병력배치는 그들의 세계전략계획의 일환으로서, 태평양에서 미군의 존재를 상쇄하기 위한 대항책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美·蘇의 군사적 입장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내의 군사적 상황은 지역내 국가들에게 심각한 중요성을 지니는 관심사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11) Joo Hong Nam, "The Entangling Conflict in Korea,"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Summer/Fall, 1987, p.93.

12) 『한국일보』, 1987년 6월 5일자.

13) Hieyeon Keum, "Recent Seoul-Peking Relations: Process, Prospects, and Limitations," *Issues & Studies*, March, 1989, p.197.

더욱이 동북아의 군사화가 지니는 세계적 의미는 그것이 세계 他지역에 매우 불확실하고 부정적인 결과를 갖게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소련 제 1 부수상 알리에프(Aliev)가 美·日·韓 전략동맹을 “美·日·韓의 전략적 블록의 형성”으로 간주하여 이에 대한 강한 거부사를 드러낸데서 분명하게 나타났다. 1986년 셰바르드나제(Shevardnaze)와 김영남의 共同聲明에서는 그것을 ‘美·日·韓의 새로운 NATO형 삼각동맹’¹⁴⁾이라고 불렀다. 반면 소련과 북한의 군사력 증강은 두 나라의 안보이익의 수호에 요구되는 것보다 훨씬 큰 규모의 것이다.

특히 한 중국측 분석가가 “平和攻勢”라고 해석한 바 있듯이, 중국은 동북아에서의 소련의 정책동기를 다음과 같이 파악하고 있다. 즉, 고르바초프의 50만명 규모의 전세계적 병력감축계획안이 미국과 NATO회원국간의 방위협력을 약화시키려는 기도인 것처럼, 그것은 중국, 日本 및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과 미국간의 관계에 불화를 조성하려는 기도라는 것이다.¹⁵⁾

위협에 대한 상이한 인식과 잘못 이해된 의도는 양국의 정책을 왜곡시키고 상호불신을 낳게 되며 결국 서로 원치 않는 결과를 초래한다. 군사적 교착상태를 타파하는 일은 관련국 정치지도자들의 시급한 임무 중의 하나이다. 1988년 12월 7일 제43차 UN총회에서 고르바초프는 아시아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병력을 포함한 소련군의 일방적 감축을 선언함으로써, 전세계에 걸쳐 교착상태에 빠진 강대국들의 군사적 태세를 타개할 원대한 계획을 선언했다.¹⁶⁾ 연설 가운데 고르바초프는 50만 병력을 감축하겠다는 것 이외에는 구체적 숫자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 감축안 가운데는 아시아지역의 20만 병력도 포함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¹⁷⁾

14) Masao Okonogi, "The Korean Peninsula: The Revival of the Old Equilibrium in the New Context," *Journal of Northeast Asia*, Spring, 1989, p.57.

15) Zagoria, *op. cit.*, p.124.

16) *The Guardian*, December 18, 1988.

17) Titarenko, *op. cit.*, p.1280.

고르바초프의 연설내용은 매우 兩極化된 국제적 군사상황의 증대한 전환점을 반영하고 있다. 그의 계획이 모두 실현된다면, 이는 냉전 이래 국제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돌파구가 될 것이다. 그 동기가 무엇이건간에 고르바초프의 접근방식이 완전히 실현되고 미국이 이에 상응하는 태도를 취하게 된다면, 그것은 의미있는 군비통제를 향한 세계적·지역적 움직임을 촉발시키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국내의 재정적 필요성, 동서 메탕트 및 소련의 제안에 대한 대응으로서 14개의 해외기지를 포함한 69개 미군기지의 군사시설을 폐쇄 혹은 감축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으며, 차후 몇년간 20만의 병력감축을 예상하고 있다. 1990년 연두교서에서 부시(George Bush) 美대통령은 美·蘇는 유럽에서의 병력을 각각 22만 5천명으로 감축하고 중부 유럽에서는 19만 5천명을 넘지 않도록 하자고 제안했다.¹⁸⁾ 소련은 이 제안에 대해 원칙적인 찬성의 뜻을 표시했다.

自國의 병력 규모를 감축하려는 美·蘇 두 강대국의 결정의 배후에 존재하는 동기는 무엇인가? 소련의 입장에서 볼 때, '新思考'의 주된 배경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이념적, 문화적 영역에서의 체제위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소련은 미국에 대해 전략적 우위를 유지한다는 전통적 구상을 실현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¹⁹⁾

비록 소련만큼 심각하지는 않지만, 미국도 역시 다른 맥락에서 유사한 문제들에 직면해 있다. 두 강대국 공통의 문제점 중 하나는 自國의 경제문제, 즉 엄청난 규모의 재정 및 무역적자의 문제이다. 이러한 결과물 낳게 된 원인의 상당부분은 장기간에 걸친 과도한 군사비 지출과 국가자원의 이용을 보다 생산적인 민간분야의 연구개발과는 반대되는 군사관련분야로 이전시킨 점에 있다. 미국이 EEC보다, 소련이 日本보

18) 『중앙일보』, 1990년 2월 2일; *The Washington Post*, December 17, 1989 참조.

19) Mikhail Gorbachev, *Perestroika: New Thinking for Our Country and the World*(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1987), pp.19-22. Seweryn Bialer, "New Thinking' and Soviet Foreign Policy," *Survival*, July-August, 1988, pp.291-294 참조.

다 세계 GNP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적어지게 된 것은 실로 역설적인 교훈이다.²⁰⁾

사태의 심각성과 그 원인이 서로 다르기는 하지만, 많은 군사비 지출 및 그 과도한 팽창은 어느 정도까지 양국의 국내문제들과 관련되어 있다. 아마도 이 두 강대국이 최근에 깨닫게 된 공통의 결론은 막대한 군사력의 증강에도 불구하고 어느 쪽도 결코 보다 안전을 보장받지 못했다는 사실일 것이다. 고르바초프는 이 점을 다음과 같이 적절히 표현한 바 있다.

세계정치에서 힘의 사용에 기초하여 사고하고 행동하는 방식은 수백년, 아니 수천년에 걸쳐 형성되어 왔다. 그러한 방식은 결코 붕괴될 수 없는 원칙으로 정착되어 왔다. 오늘날 그것은 모든 합리적 기반을 상실해 버렸다. 전쟁은 단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책의 연속이라는 클라우제비츠의 경구는 그 당시에는 고전적인 것이었지만, 이제에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이 되어 버렸다. 그것은 이제 도서관에나 보관되어야 할 것이다. 역사상 처음으로 국가간 관계의 人間化와 함께 모든 인류에 공통적인 도덕적, 윤리적 규범을 국제 정치의 기반으로 삼을 것이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다.

힘과 안보의 새로운 변증법은 군사력, 즉 핵무기에 의한 국제적 갈등의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데에서부터 비롯되었다. 안보는 이제 더 이상 군사적 수단에 의해 확보될 수 없다. 다시 말해 안보는 무기의 사용이나 억지력에 의해서, 그리고 ‘창’과 ‘방패’에 대한 끊임없는 개발에 의해서는 결코 확보될 수 없다.²¹⁾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경쟁은 국내외적으로 한 국가의 경제력을 서서히 약화시키는 反生産的 경향을 가지므로, 군사력이 반드시 국가의 안전확보에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각성이 서서히 일어나게 되었다.

20) Paul M. Kennedy *et. al.*, *Lessons from The Fall and Rise of Nations* (Washington, D.C.: The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1987), p.6; Paul M. Kennedy, *The Rise and Fall of the Great Powers: Economic Change and Military Conflict from 1500 to 2000* (New York: Random House, 1987), pp.414-437; Richard Rosencrance, *The Rise of the Trading State: Commerce and Conquest in the Modern World* (New York: Basic Book, Inc., Publishers, 1986), pp.22-43 참조.

21) Gorbachev, *Perestroika*, p.141.

다른 맥락에서 보면, 두 강대국은 모두 지역 혹은 세계의 문제에 있어서 군사력을 정치력과 영향력의 수단으로 전환시키는 것에 대한 한계를 깨닫게 되었던 것이다.

4. 새로운 지역경제 이익

아주 최근까지 이념에 바탕을 둔 지역적 정치동맹은 한국과 동북아 및 다른 지역의 사회주의국가와의 경제교류를 허용하지 않았다. 한국의 경제관계는 주로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비공산국가와 이루어져 왔다. 한국은 중국, 소련과 여러 형태로 간접교역을 갖기는 했지만, 이 지역 내의 사회주의국가들과 한국의 경제적 보완성을 고려할 때 그 규모는 매우 제한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한국과 중·소간의 직·간접교역 규모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무역진흥공사(KOTRA)에 따르면, 1990년 중 사회주의국가에 대한 예상 수출액은 美貨로 약 22억 8,000만 달러로서, 이는 1989년의 18억 8,000만 달러보다 21.3% 증가하게 되는 셈이다. 소련에 대한 한국의 수출은 약 100%의 증가율, 동유럽국가에 대한 수출은 81.8%의 증가율이 각각 기대되는 반면, 중국에의 수출은 1989년과 별 차이없는 14억 2,000만 달러가 예상되고 있다.²²⁾ 1985년 한·소간의 총무역 규모는 5,840만 달러였으나, 이러한 쌍무교역 수치는 1988년 2억 400만 달러에서 1989년에는 거의 6억 달러로 증가하였다.²³⁾ 한국의 대중국 교역량은 약 32억 달러로 추산된다.

한국의 총무역규모(약 1,200억 달러)를 고려할 때, 사회주의국가들과 한국의 교역규모는 비록 규모 자체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미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사회주의국가에 대한 한국 기업의

22) *The Korea Economic Journal*, January 29, 1990.

23) *The Korea Post*, January 1, 1990. 『동아일보』, 1990년 2월 25일자.

투자는 1989년의 경우 22개 사업에 6,130만 달러에 달했다.²⁴⁾ 한국과 새로운 무역상대인 사회주의국가와의 경제교류가 본격화된 것처럼 보이는 까닭은 무역규모가 급신장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 때문이다. 아마도 더욱 두드러진 예증은 소련이 한국 조선소의 주요한 선박구매자로 등장했다는 사실이다. 소련은 1989년 13억 8,000만 달러에 달하는 총 30척의 선박을 주문하였다. 이러한 주문의 일부는 노르웨이를 통해 이뤄졌다. 소련의 주문액은 1989년 국내 조선업체가 수주한 총주문액 33억 8,900만 달러의 40%에 해당한다.²⁵⁾ 대한항공(KAL)과 에어로플로트(Aeroflot)간에 체결된 양국간 상업운항협정은 양국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또 다른 진전으로 보여진다.

하나의 경제권으로서의 동북아는 세계의 어느 지역보다도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 지역 경제발전의 활력은 모든 국가들에 의해 잘 인식되고 있다. 서기 2000년까지 日本은 약 4조 달러, 중국은 약 1조 달러, 한국은 약 7,570억 달러의 GNP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지역은 이미 세계 GNP의 거의 20%를 생산하고 있다.²⁶⁾ 만약 소련이 이 지역의 경제협력관계에 포함된다면, 동북아 주요 국가들의 GNP 총합계는 세계 GNP의 약 30%를 넘게 될 것이다. 만약 이 지역의 블록화된 경제적 상호의존망에 미국이 포함된다면, 이 블록의 총 GNP는 세계 GNP의 55%를 넘을 수 있을 것이다. 대만, 홍콩, 몽고와 북한이 이 거대한 경제 블록에 포함된다면, 그 때 이 지역은 장차 세계를 지배하는 경제력을 지니게 될 것이다.

한국의 경제는 지난 20년간 극적인 변화를 이루어왔다. 1960년대초에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87 달러에 불과하였다. 1990년 한국의 1인당 연평균 국민소득은 5,220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데, 이는 북한의 3~4배에 해당하는 것이다. 지난 10년간 한국의 경제성장은 세계의

24) *The Korea Economic Journal*, January 28, 1990.

25) *Ibid.*, January 22, 1990.

26) Zagoria, *op. cit.*, p.134. 한국의 예상 GNP에 대해서는 *Korea Business World*, February, 1990을 볼 것.

어느 나라보다 빠른 것이었다. 예를 들면, 1986년, 1987년, 1988년 한국의 연평균 경제성장율은 최소한 12.5%를 넘어섰다. 반면 북한의 경제규모는 한국과 비교할 때 상당히 작은 것이다. 아마 한국의 경제는 북한보다 적어도 5배 이상의 규모일 것이다.²⁷⁾

한국의 경제적 업적과는 명백히 대조적으로 북한의 경제는 70년대 이래 상당히 느린 속도로 성장해 오고 있다. 일본의 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1) 외환보유고의 부족과 외채의 누적, (2) 지속적인 식량부족, (3) 빈약한 생산시설과 노후한 기술, (4) 부적절한 경제적·정치적 하부구조, (5) 에너지공급의 부족, (6) 노동력부족 등의 경제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분석되었다. 북한의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은 국가계획위원회의 책임자가 지난 2년 사이에 적어도 4차례 교체되어 왔다는 사실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북한의 심각한 경제문제를 반영하는 또 다른 사실은 外債상환의 지불거부이다. 북한은 적어도 7억 7,000만 달러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바 있다.²⁸⁾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의 많은 부분은 북한의 방위비지출 탓이다. 한국의 5.4%에 비해, 북한은 GNP의 24%를 국방예산에 할애하고 있다. 이라크를 예외로 한다면,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의 GNP를 방위비에 소비하고 있다.²⁹⁾ 한반도의 불안정한 힘의 균형을 유지해 주는 주한미군의 존재가 없다면, 현재 북한의 가공할 군사력증강은 한국에 비해 명백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 한편 랜드(RAND)연구소의 한 보고서는 GNP의 6~7%에 해당하는 한국의 국방비를 따라잡기 위해서 북한은 GNP의 약 36~42%를 방위비에 배정해야만 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 연구는 “한국의 경제적, 기술적 및 군사적 능력은 차후 10년간

27) 『중앙일보』, 1989년 12월 6일자; Doug Bandow, “Leaving Korea,” *Foreign Policy*, Winter, 1989~1990, p. 80; Donald S. MacDonald, “Security in Northeast Asia,” *The Washington Quarterly*, Autumn, 1989, p. 150 참조.

28) Kuranari, *op. cit.*, pp. 71-73; Bandow, *op. cit.*, p. 80.

29) 국방부, 『국방백서』 (1988), p. 154.

북한에 비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 결과 이뤄지는 균형은 한국쪽에 점차적으로 유리하게 전개될 것이다”라고 결론짓고 있다.³⁰⁾

고르바초프의 분석대로, 사회주의국가들의 근본적 문제점은 체제위기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이는 과도한 중앙집권화와 체제를 달리하는 국가로부터의 고립이라는 문제가 장기간 축적된 결과로 빚어진 것이다. 중국, 소련, 북한을 포함한 거의 모든 사회주의국가들이 이 문제로 고통을 겪어왔다. 북한의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가장 심각한 형태로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북한의 정치적, 경제적 고립은 대부분 자신의 정치적 이유로 인해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교역관계를 사회주의국가들에 국한시키려는 노력은 북한경제의 향상에 거의 도움을 주지 못하게 되었다. 더욱이 국가목표수행에서 독립과 자립의 이념이며 북한의 정치철학인 주체사상은 의견상 그럴듯해보이기는 하지만, 자급자족을 강조하고 상호의존적인 세계로부터 정치적·경제적 고립을 초래하였다. 점차 상호의존성이 높아져 가는 세계속에서 여타지역은 물론 동북아시아의 사회적·정치적 체제를 달리하는 국가들간에 사상, 기술 및 상품의 상호교류는 이 지역 모든 국가들의 전진한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자주 인용되는 그의 UN연설에서 이 점을 다음과 같이 적절히 표현하고 있다.

과거에는 서로 상이하다는 사실이 흔히 상대를 거부하는 요인이 되곤하였다. 오늘날 그것은 서로를 풍부하게 하고 서로를 끌어당기는 요소가 되고 있다. 사회체제, 생활방식, 특정 가치의 선호에 대한 상이함 속에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존재한다. 이 사실을 회피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국제체제내에서 상호 이해관계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점 또한 불가피한 것이며, 이것이 바로 생존과 진보의 조건이 되어 왔다.³¹⁾

이 연설 가운데 고르바초프는 또한 “외부세계의 업적 그리고 외부와

30) Bando, *op. cit.*, p.84에서 재인용.

31) *The Guardian*, December 18, 1988.

의 균등한 협력이 지니는 잠재력을 활용하지 않고 다른 국가들과 ‘독자적인 경로’를 따라 내적 변환이 전개된다면, 그것은 국가적 목표들을 더 이상 진전시킬 수 없다”고 언급했다.

1990년 2월 10일 소련 외무장관 세바르드나제는 “한반도 장벽”을 무너뜨리고 “인민의 자유로운 왕래를 보장하는” 국제적 노력을 호소했다.³²⁾ 만약 “한반도 장벽”이 두 적대정권간에 강화되어온 “마음의 장벽”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 이러한 관심은 올바른 방향을 향한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한반도에서의 교착상태의 지속은 한국과 이 지역내 이념적으로 상이한 국가들간의 긴밀한 지역협력증진에 대한 주된 장애물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 지역 국가들간의 “장벽”은 마땅히 허물어져야 하며, 이 지역국가들은 지역협력을 위해 실행가능한 체제의 수립을 향해 나아가야만 할 것이다.

5. 미래의 전망

동북아지역은 풍부한 자연적, 문화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세계의 어느 지역도 이 지역 만큼 풍부한 문화적 전통과 근면하고 재능있고 잘 훈련된 국민을 갖고 있지 못하다. 이 지역이 미래의 흐름을 대표할 것이라는 점은 너무도 명백하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말처럼 “소련은 유럽국가인 동시에 아시아 국가이다. 소련은 장차 세계정치에 있어서 중심이 될 지역인 亞·太지역이 현상태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게 되기를 바라며, 이 지역 모든 국가들의 이익 및 그들간의 상호이익의 균형이 적절히 고려되기를 또한 바라고 있다.”³³⁾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소련을 포함한 동북아지역에 있어서 적극적이고 자유로운 경제교류에 행하는 데 대한 주요 장애물의 제거가 이 지역의 경제적 번영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결국에 가서는 두 가지 미해결

32) 『한국일보』, 1990년 2월 11일자.

33) Gorbachev, *Perestroika*, p. 180.

된 정치적 이슈—한국과 중국의 분단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만약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고 이 지역 모든 국가들이 자유롭게 사상, 기술, 공업제품을 교환하고 문화교류를 가질 수 있게 된다면, 이 지역은 전례없는 평화와 번영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한반도문제가 가까운 장래에 해결될 것이라는 어떠한 환상도 갖고 있지는 않다. 남북한의 보다 현실적인 길은 당분간 해결하기 어려운 정치적 이슈를 보류하고 모든 국가들과의 상호 경제 및 문화 교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북한이 한반도내의 “유일한 주권국가”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은 그들의 방안 외에는 한반도문제 해결을 위한 어떠한 형태의 방도나 제안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으로서, 문제해결을 위한 합의의 도출을 어렵게 하고 있다. 북한당국은 남북한 UN 동시 가입이나 교차접촉 및 교차승인에 대해서도 줄기차게 반대해 왔다. 북한의 관점에서 볼 때, 교차접촉은 궁극적으로 교차승인으로 나아가거나 교차승인을 예비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³⁴⁾ 교차승인은 아니더라도, 교차접촉은 지역내 경제교류를 위한 전제조건이 된다. 이와 같은 교차접촉을 거부하는 것은 이 지역의 국가들이 누릴 수 있는 안정과 공동번영의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가 된다. 그러한 정책은 북한당국을 비롯한 어느 국가에도 기여하지 못하는 것이다. 상호신뢰의 기반 위에서 경제교류가 축적되어 간다면, 이 지역 몇몇 국가간의 외교관계의 부재도 결코 뛰어 넘을 수 없는 장애물이 될 수는 없다.

이러한 경제적, 문화적 협력이 장기간에 걸쳐 실행되어 간다면 동북아국가들은 평화공존의 길을 배우고 미해결된 정치적 이슈의 타결책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는 반드시 이 지역 국가들의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적대의 종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지역 혹은 국제관계에서 폭력에 의존하지 않는 지역적 안정구조 속

34) Ralph N. Clough, *Embattled Korea: The Rivalry for International Support*(Boulder: Westview Press, 1987), p.377.

에서 평화와 영향력 행사를 위한 보다 문명화된 투쟁과 경쟁의 접근방식이라는 점이다.